친시장 경제팀 전면 배치…소득주도→시장주도 성장 전환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8명 발표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 전망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방안 추진
북 핵실험 등 도발 대응도 촉각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윤 정부의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부동산 정책도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예상되고, 새 정부의 대북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발표된 경제 파트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희룡 전 지사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 안정에 대해선 "단순히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여러 거시적 경제 요인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거시적 흐름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인선은 빠졌지만, 이 자리에도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를 강조해온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과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으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윤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종섭 전 합참차장(예비역 중장)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등 군 조직이 연쇄 이동하는 데 따른 '군심'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차관실 등 핵심 부서를 제외한 국방부 부서는 이달 말까지 이전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이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내달 14일까지는 이전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에서 불만 등 흐트러진 군심을 수습하는 것은 이 후보자의 역할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새 원내대표에 '윤핵관' 권성동 의원

조해진에 60표차 '압승'
"尹정부 순항 위해 협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62·강원 강릉·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남 3선의 조해진 의원을 누르고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소속 의원 110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81표를 얻어 21표를 얻은 조 의원을 6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권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이 표심을 몰아준 배경에는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정치가 그렇다.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1년차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분 한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대 비핵관'의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윤핵관'이라 불리는 권 원내대표가 큰 격차로 당선되면서, 향후 당 운영은 새 정부 초기 긴밀한 당정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검수완박' 집단반발에 민주 "입법부가 우습나"

내일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 채택 의원총회 앞두고 여론전 강화
검찰, 고검장·검사장 회의 잇따라 열어 법안 처리 총력 저지 결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정책 의원총회(12일)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검찰의 반발도 거세다.

홍서윤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반발을 촉발한 '법사위 사보임'을 두고도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사보임을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 주장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지난 8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에 동의를 표한 것을 비롯해 검찰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에 걸쳐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9일 검사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다 11일에는 전국 검사장회의까지 예상돼 있어,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